주간건설 Review

489호 2017.6.9(금)



(사)한국건설경영협회
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
홈페이지 : http://www.kfcc.or.kr, 연 락 처 : 02-771-7936
주 소 : (121-916)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-2103

주간건설 Review

CONTENTS

▣ 업계 동향

- 대우건설, 건설업계 4차 산업혁명 선도
- 포스코건설, '더 플러스 한마음 축제'
- 한화건설, 사내도서관 '채움' 개관

▣ 건설경제 일반동향

- 주택시장 선행지표 악화
- OECD,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2.8%로 하향전망

▣ 건설 제도정책 동향

- 100억 이상 공사에의 최저가낙찰제 도입법안 의원입법 발의
- 실질적인 '공기연장 간접비 보전방안' 마련 시급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- 철도시설공단, '청렴계약 특수조건' 개정·시행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7.6.3.(토)~2017.6.9(금)> | 제489호 2017.6.9(금)

<업계 동향>

◈ 대우건설, 건설업계 4차 산업혁명 선도



서해선 철도 4공구 건설현장에서 대우건설 직원이 '실시간 위치기반 장비관리' 기술을 적용하고, 드론을 활용해 토공량을 산출하는 장면

○ 6월8일 대우건설은 지난해 개발한 '대우 스마트건설(Daewoo Smart Construction)' 시스템을 앞으로 참여하는 신규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

○ 대우 스마트건설(DSC) 시스템은 사물인터넷(IoT)과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해 건설 현장의 모든 안전과 공정, 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시공관리 자동화 기술로 △3D 설계를 기반으로 시공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△스마트맵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해 활용 가능한 정보로 변환시키는 기술 △현장에서 각종 IoT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작업자가 편리하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

○ 특히 DSC시스템은 근로자-장비-공정의 통합관리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,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동 대처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하였음

○ 대우건설은 서해선 철도4공구,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현장을 DSC 시범현장으로 운영하며, DSC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앞으로 신규 프로젝트에도 토목 현장을 필두로 설계단계부터 품질, 공정, 안전 등 전 사업과정에 특별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DSC 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

◈ 포스코건설, '더 플러스 한마음 축제'

○ 6월2일 포스코건설은 올해 1분기 흑자전환 성공에 이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새로 다지기 위해 '더 플러스(the Plus) 한마음 축제'를 개최하였음

○ 인천 송도 달빛 축제공원에서 열린 이날 축제에는 송도 근무직원을 비롯해 포항, 수도권 인근 현장직원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흑자전환에 성공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 올해 경영목표 달성까지 전 임직원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전력하자는 취지로

마련되었음



임직원들과 축제시작을 알리는 파이팅을 외치는 한찬건 사장(오른쪽)

○ 포스코건설은 △프로젝트 이익률 제고, △계획손익 준수 및 주요사업 이슈 선제적 대응 △불필요한 경비 최소화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해 올해 1분기 매출 약 1조6400억원, 영업이익 1378억원을 달성하였음

○ 한편, 포스코건설은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△조직은 성과 더하기 △리더는 솔선 더하기 △직원은 로열티 더하기 △고객은 행복 더하기라는 의미에서 더 플러스(the Plus) 운동을 펼치고 있음

◈ 한화건설, 사내도서관 '채움' 개관



'채움' 사내도서관에서 기념촬영을 한 한화건설 직원들

○ 한화건설이 '젊은 한화' 구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의도 사옥 11층에 사내도서관 '채움'을 개관하였음

○ 6월1일 문을 연 채움은 지식과 교양, 휴식을 채운다는 의미로 독서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

○ 한화건설은 임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내도서관에 건설관련 전문서적 500여권을 포함한 20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였으며 이 도서들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증으로 조성돼 의미를 더했음

○ 한화건설은 매달 임직원들에게 추천도서 목록을 받아 도서를 구매하고, 상시 임직원들에게 도서를 기증받아 사내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

◈ 주택시장 선행지표 악화

○ 6월8일 한국개발연구원(KDI)는 '경제동향(6월)'을 통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건설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됨

<주요내용>

❒ KDI '경제동향(6월)' 주요내용

- 건설기성이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였으나, 주택관련 선행지표는 부진을 지속하며 향후 건설투자의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
- 올해 4월까지 건설기성(불변)은 토목부문이 전년동기대비 1.2%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, 건축부문이 27.4%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8.4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선행지표 중에서는 건설수주가 전년동기대비 10.7% 증가율을 보이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
- 문제는 주택관련 선행지표인 주택인허가와 건축착공면적, 건축인허가면적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17.1%, 9.6%, 7.2%의 감소세를 보이며 크게 악화되고 있고 올해 4월말 현재 60,313호인 미분양주택수 역시 전년도 4월말과 비교해 12.1% 증가한 수치여서 향후 건설투자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

<4월 국내건설시장 주요지표>

(단위 : 십억원, 천㎡, 호)

구분		2016년	2017년	증감율
건설기성액	건축	21,141	26,931	27.4%
	토목	9,722	9,609	-1.2%
	합계	30,864	36,540	18.4%
국내건설수주		39,858	44,123	10.7%
건축허가면적		56,219	52,198	-7.2%
건축착공면적		42,967	38,845	-9.6%
주택인허가		222,684	184,668	-17.1%
미분양주택수		53,816	60,313	12.1%

주) 2010년 불변가격 기준, 미분양주택수 제외한 각 지표는 각년도 4월말 누계기준
자료 : 통계청, 국토교통부

❒ 평가

-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지만, 주택관련 선행지표는 이미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고 그 동안 국내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주택경기가 급격한 위축세로 전환될 경우 건설투자 개선을 제약하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
-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투기지구 지정이나 집단대출 등 각종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규제 강화 등은 우리 경제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주택·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보다는 안정화 및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
- 한편, 지난 6월7일 OECD도 '경제전망(OECD Economic Outlook)'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은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음

◈ OECD,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2.8%로 하향전망

○ 6월8일 OECD가 경제전망(OECD Economic Outlook)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가운데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.8%로 제시

○ 동 보고서는 아시아·유럽의 내수 확대에 따른 세계교역 회복 및 제조업 생산 증가, 민간부문 심리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높은 정책 불확실성,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, 미약한 임금상승률, 소득 불평등 지속 등 하방요인 상존한다고 평가하고 세계경제는 '17년 3.5%, '18년 3.6%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

○ 특히 OECD는 한국경제와 관련해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해 주목됨

<OECD 경제전망보고서 주요내용>

❒ 한국경제 전망 : 2017년 2.6%, 2018년 2.8% 성장 전망

- 2017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, 기업투자 증가, 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며, 2018년은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·기업 투자 증가가 주택투자 증가세의 점진적 둔화를 상쇄하며 성장세 확대 전망
- 지정학적 긴장 고조, 韓·美 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, 부동산·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등은 하방요인이나, 예상보다 빠른 세계교역 증가와 효과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내수 진작, 수출 실적 개선은 상방요인

❒ 정책권고 :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병행

-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, 지속적인 재정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필요
- **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(통화정책 완화수준의 점진적 축소는 물가 및 가계부**

채 관리에 도움)

- 실업급여,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직지원 강화 필요
-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, 여성·청년·고령층 취업지원,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추진 필요

<한국경제 전망(%)>

	2016	2017		2018	
	'17.6월	'16.11월	'17.6월	'16.11월	'17.6월
. G D P 성장률	2.8	2.6	2.6	3.0	**2.8**
- 민간소비	2.5	2.4	2.0	2.9	**2.7**
- 총고정자본형성	5.2	3.5	7.2	3.1	**2.9**
- 수 출	2.1	2.2	3.9	2.8	**4.4**
- 수 입	4.5	2.7	7.5	2.7	**3.8**
. 실업률	3.7	3.8	3.8	3.8	**3.7**
. 소비자물가	1.0	1.5	2.0	1.8	**2.0**
. 일반정부 재정수지	2.0	2.5	2.0	2.6	**1.8**
. 경상수지(對 GDP)	7.1	6.4	6.0	6.5	**6.0**

자료 : OECD "OECD Economic Outlook"(2017.6.7.)

◈ 100억 이상 공사에의 최저가낙찰제 도입법안 의원입법 발의

○ 5월30일 국회 정동영 의원(국민의당)은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

○ 정동영 의원실은 현행 '종합심사낙찰제' 뿐만 아니라, 그 이전 '최저가낙찰제도'도 저가심의제 도입으로 "운찰제" 요소가 존재한다면서, 그로 인해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므로, 진정한 의미의 최저가낙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함

○ 이에 대해, 건설업계는 과거 가격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의 폐단을 막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 지 2년도 안돼 최저가낙찰제 부활 입법이 나온 것 자체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,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

○ 전문가들 또한 최저가낙찰제 부활법이 가격 위주의 낙찰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,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배치된다고 지적함

<개정안 주요내용>

❒ **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의 최저가낙찰제 도입**

- 경쟁입찰에 있어서 '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'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함

◈ 실질적인 '공기연장 간접비 보전방안' 마련 시급

○ 기획재정부에 따르면, 5월말까지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접수한 결과, 단 1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

○ 이는 결국 정부가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해 올해 초부터 개정·시행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관련 규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

○ 이에 따라,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'총사업비 관리지침'('17.1.1 개정·시행)과 관련하여, 애초 총사업비 조정 및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였으므로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음

○ 즉, 현 제도(총사업비 관리지침)상 간접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, 극히 일부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하더라도 발주자가 요구를 회피하거나 정부와 국회까지 거치는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것

○ 법조계도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 내용을 볼 때, 올 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기연장 간접비 신청 및 지급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음

○ 한편,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발주자 귀책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, 건설사들이 그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

<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('17.1.1) 내용 -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규정>

❒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, 총사업비 조정 허용

-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(일반관리비·이윤 제외)이 추가로 발생하여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 가능
- 다만,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

❒ 공기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요건 등

-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공기연장의 책임소재·사유,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, 신청은 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1회 신청에 한함
- 조기 준공된 경우, 공사현장에 직·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하는 등 정산

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○ 고용노동부는 6월2일 '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'을 입법예고함

<개정안 주요내용>

❒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

-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,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과 직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-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함
-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발주청 소속의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, 「건축법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한 자,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으로 함

❒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

-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, 보고대상 산업재해를 재해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와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
- 중대대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,000만

원을 부과하고, 일반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되,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,500만원으로 함

◈ 철도시설공단, '청렴계약 특수조건' 개정·시행

○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월말 '청렴계약 특수조건'을 개정하고, 지난 5월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

○ 이는 김영란법 시행 내용을 계약제도에 반영하고, 최근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·부패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

<주요 개정내용>

❒ **청렴계약 위반 금지사항 추가**

-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방의 금지사항으로, '금품 등 제공' 뿐만 아니라 "부정청탁"도 포함시킴
- 이는 지난해 김영란법(부정청탁 금지법)이 시행되면서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포함시킨 것

❒ **청렴계약 준수 대상 확대**

- 청렴계약을 준수해야 할 대상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뿐만 아니라, 자재 납품업체,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함
-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등 계약 체결시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받아서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토록 함
- 하도급 업체 등이 청렴계약의무를 위반하여 철도시설공단이 통보한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업체와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함

❒ **'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' 신설**

- 입찰담합행위가 발생한 경우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%,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%를 철도시설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함